

정책현안자료 2006-06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한 교육의 방향

2006. 9.

김용문

오영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I. 서언	1
II. 저출산 현상과 원인	2
1. 출산율 변동 추이	2
2. 저출산 원인	2
III. 인구구조 변동과 파급효과	10
1. 인구구조 변동 전망	10
2. 인구구조 변동의 파급효과	12
IV. 교육의 기본방향	16
1. 저출산 원인관련 교육의 기본방향	16
2. 고령사회 대응 교육의 기본방향	17
V. 결론	19
부록	21

I . 서언

한 국가의 인구구조는 출산과 사망 및 이동의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인구학적 요인의 변동은 동서고금을 통해 보아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특히 인구변동요인 중 출산은 최근 1.0(합계출산율) 수준에 근접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저출산현상과 더불어 평균수명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통계청(2005)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빠르며, 그 수준도 2040년대에 40%에 육박하여 세계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 속도는 우리의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파를 가져올 것이다. 저출산으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며, 노동력 자체도 고령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저출산으로 세입 기반이 감소하는 반면 사회보장부담은 오히려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결국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대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구현이 어려워지고 개인의 삶의 질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결국 인구구조의 급변에 따른 적절한 대응노력이 부재하거나 미흡할 경우,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담보될 수 없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인구억제적 정책기조와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온 지난날의 경제사회제도가 그대로 계속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밝지 않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필연성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극복하지 못할 인구현상은 아니다. 그 이유로 인구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출산은 자연적이기 보다 인위적으로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는 향후 우리사회에 당면하게 될 위기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그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이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변화를 유도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동시에 그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은 그 기초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구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의 인식·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는 단시간 내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개입을 통한 근본적·장기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과 파급효과를 진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저출산 현상과 원인

1. 출산율 변동 추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자녀수)은 1970년 4.5에서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2.1)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본격적인 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다.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05년에는 1.08로 세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1). 초저출산현상은 합계출산율 1.3 이하에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다.

〈표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화추이

구분	1970	1980	1983	1990	2000	2003	2005
합계출산율	4.53	2.83	2.08	1.59	1.47	1.19	1.08
출생아수(만명)	101	87	78	66	64	49	43

주: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게 될 평균자녀수.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51.

2. 저출산 원인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로는 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의 과중한 부담,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정, 주거불안정,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을 위한 가족지지 약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가정의 양립 곤란, 여성의 출산건강 수준 약화 등 다양하다. 이들 요인은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가족관, 자녀관 등 가치관의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인구학적 요인으로 만혼과 독신경향(미혼율)이 증가하고, 결혼을 한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출산을 기피하거나 줄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저출산 원인의 구조에서 교육의 영향을 가장 밀접하게 받고 있는 가치관 관련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결혼·출산행태를 결정짓는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결혼관 자

녀관, 성역할관(양성평등관) 및 정보건에 관한 인식 및 태도를 들 수 있다.

가. 가족관의 변화

1) 결혼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약하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편이 좋다)를 보인 비율은 49.2%에 낮으며, 특히 ‘반드시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12.9%에 불과하다. 미혼남성의 결혼관은 미혼여성에 비해 긍정적인 편이나(71.4%), “반드시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29.4%로 아주 낮은 실정이다(표 2).

한편 미혼남녀(20~44세)들의 본인 결혼에 관한 태도를 보면, 결혼을 희망하는 비율은 남성의 경우 82.5%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73.8%로 나타났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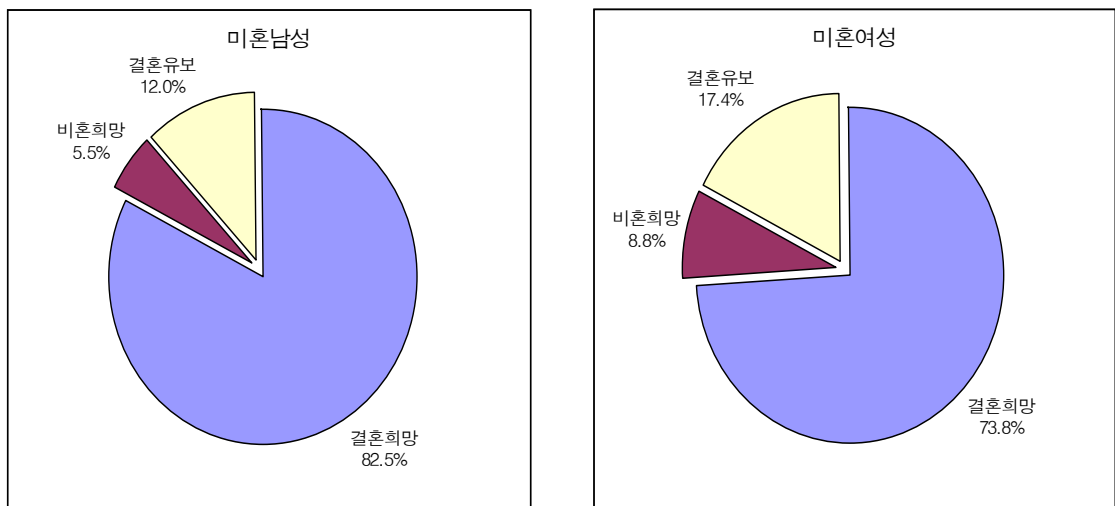
〈표 2〉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적인 결혼관, 2005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결혼해야함	결혼하는 편	해도 안해도 무방	결혼하지 않는 편	모름	계 (명)
미혼남성	29.4	42.0	23.5	2.2	3.0	100.0(1,466)
미혼여성	12.9	36.3	44.9	3.7	2.2	100.0(1,2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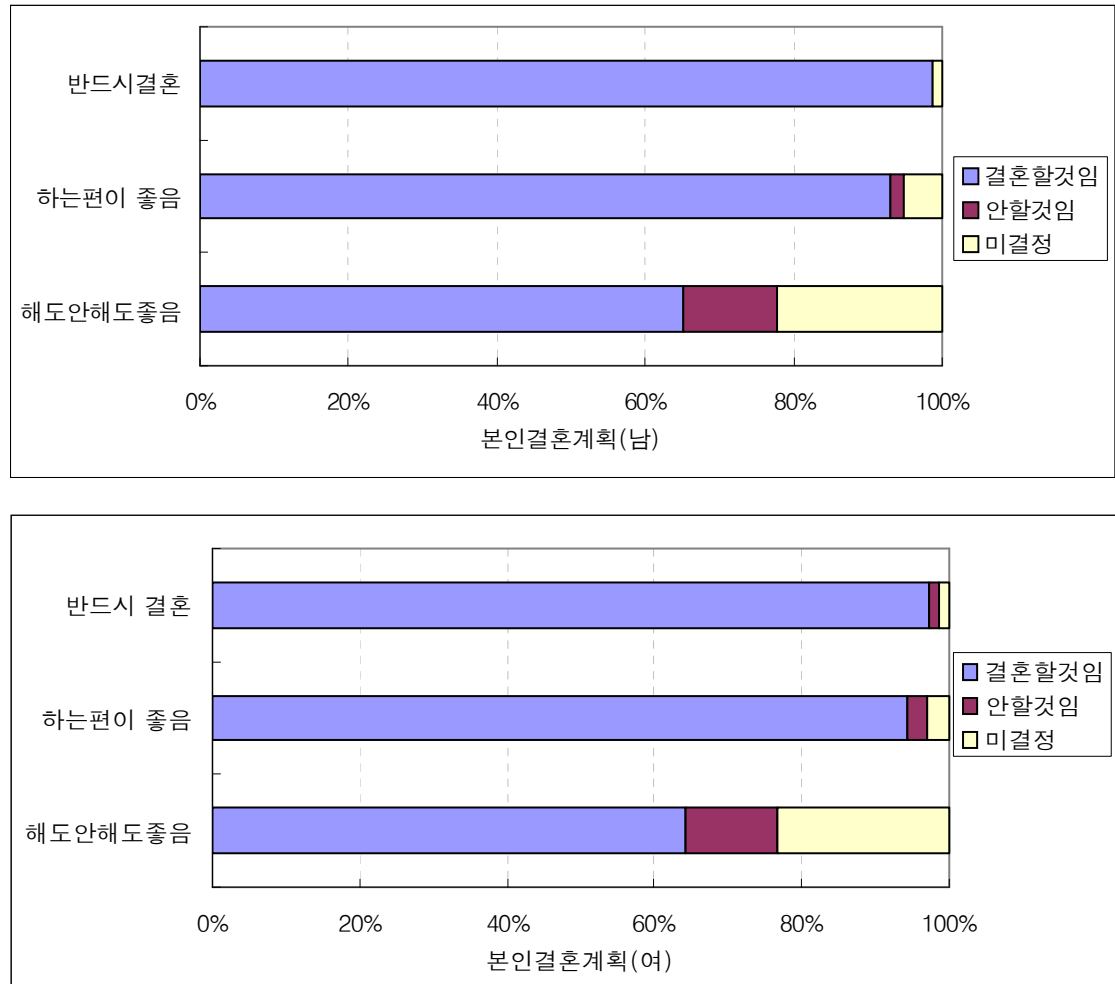
[그림 1] 미혼남녀(20~44세) 본인의 결혼 희망여부, 20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2005.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관과 본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결혼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미혼인구 중 본인은 결혼을 하겠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그림 2). 따라서 일반적인 결혼관은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질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결혼관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중요함을 제시해 준다. 즉, 결혼한 개인이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동시에 결혼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2] 결혼관과 본인 결혼계획 간 차이, 20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2005.

2) 자녀관

자녀 가치에 대한 태도로서 자녀의 필요성과 자녀효용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유배우부인의 태도는 1997년 73.7%에서 2005년 23.4%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자녀를 갖는 것이 좋다는 태도는 1997년 16.6%에서 2005년 4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는 1997년 9.4%에서 2005년 35.0%로 급격히 증가하였다(표 3).

〈표 3〉 기혼여성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가져야 함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모르겠음	계 (명)
1997년	73.7	16.6	9.4	0.3	100.0(5,409)
2005년	23.4	41.5	35.0	-	100.0(3,58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2005.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미혼남성의 61.1%, 미혼여성의 53.8%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여성의 64.9%에 비해 낮다(표 4). 따라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과거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의 위치에서 점차 약화되어 선택적인 가치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의 태도, 2005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계 (명)
미혼남성	19.4	41.7	33.6	5.3	100.0(1,464)
미혼여성	15.6	38.2	39.2	7.0	100.0(1,20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2005.

한편 <표 5>에서 자녀효용가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유배우 여성의 경우 전통적 가치관(노후보장, 가계계승 등)은 크게 퇴색된 반면, 정서적 가치(부부관계 강화, 노후 외로움 완화 등)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적인 가치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자녀를 필요로 하나, 정서적 가치를 위해서는 소자녀만으로 충분하므로, 이와 같은 자녀관 변화는 결국 소자녀 선호로 연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녀효용성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견해에서는 전통적인 가치측면(노후보

장, 가문계승, 출산의 사회적 의무 등)이 약화되고 대신 정서적인 가치측면 (노후 외로움 완화, 부부관계 강화 등)에 대해서 찬성하는 태도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도구적 가치로서의 자녀가치보다는 미래가임세대인 미혼남녀들은 정서적 가치로서의 현대적 가치를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과거 자녀가치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 2005

(단위: %)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유배우부인	64.1	33.7	2.1	0.1	100.0
미혼남성	50.5	44.5	4.3	0.7	100.0
미혼여성	43.2	49.3	6.7	0.7	100.0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유배우부인	61.6	35.2	3.0	0.1	100.0
미혼남성	45.3	48.5	5.6	0.6	100.0
미혼여성	35.8	54.9	8.6	0.7	100.0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유배우부인	37.0	42.2	19.1	1.7	100.0
미혼남성	35.1	45.5	16.5	2.9	100.0
미혼여성	32.0	47.2	18.4	2.4	100.0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다					
유배우부인	3.7	17.3	63.5	15.5	100.0
미혼남성	11.1	32.8	46.2	9.8	100.0
미혼여성	7.7	35.5	47.8	9.0	100.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유배우부인	7.4	19.8	53.9	18.9	100.0
미혼남성	15.0	33.5	40.3	11.1	100.0
미혼여성	6.5	23.4	51.9	18.3	100.0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유배우부인	7.7	30.5	46.8	15.0	100.0
미혼남성	10.6	30.1	45.7	13.6	100.0
미혼여성	6.1	29.4	50.2	14.3	100.0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유배우부인	8.7	39.7	42.6	8.9	100.0
미혼남성	12.8	47.5	34.6	5.2	100.0
미혼여성	8.0	42.6	42.0	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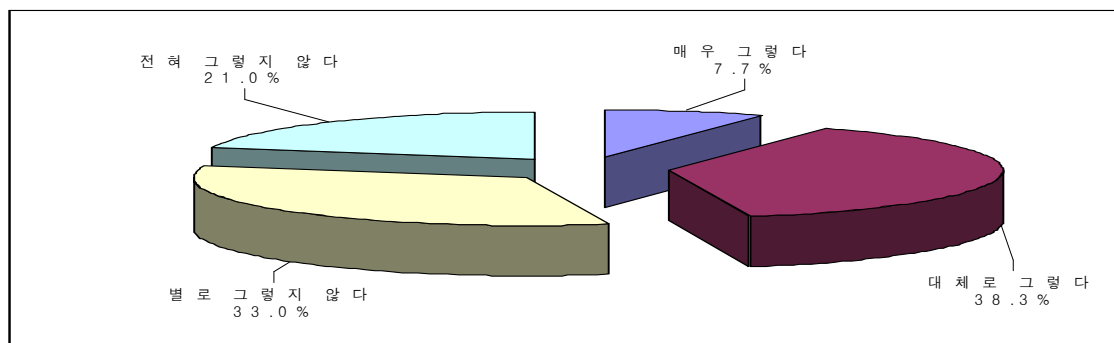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2005.

나. 성역할관

여성의 학력수준은 여성의 인적자본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참여의 기회와 보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출산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결혼 및 출산의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취업여성의 출산율도 낮아지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와 출산간의 관계가 항상 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 예로 스웨덴 등의 서구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모두가 높게 나타난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간의 관계를 가족 내에서의 양성평등적 역할 정도에 따라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와 사회(기업)의 노력 여하에 그 방향성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에서는 한국사회에서의 성역할관을 집중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취업기혼여성의 가사분담에 관한 부부간의 공평성에 대한 응답을 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절반이 넘는 54.0%로 나타났다(그림 3).

[그림 3] 가사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견해, 20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2005.

구체적인 가사와 자녀양육 분담실태를 보면, 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사분담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66.2%이다. 또한 자녀양육 분담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또는 대체적으로 부인이 양육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55.7%에 이르러, 자녀양육의 역할 측면에서도 부부간 분담의 불공평성이 나타나고 있다(표 6).

〈표 6〉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부부간 역할 분담, 2005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이	대체로 부인이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부부이외 사람	계 (명)
가사분담	26.5	39.7	27.7	1.1	-	5.0	100.0(1,698)
자녀양육분담	19.0	36.7	34.6	3.2	0.1	6.4	100.0(1,15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2005.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사 및 자녀양육의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됨으로써, 취업여성의 경우 결혼 또는 출산 후 경력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역으로 경력단절을 원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또는 출산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실례로 취업 중이었던 여성이 결혼 전후로 직장을 그만 둔 비율은 61.2%로 나타났다. 결혼 전후 경력단절 비율은 연령이 높은 기혼여성에게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표 7). 현재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인 기혼여성의 결혼 전에는 전반적으로 여성 취업률이 지금보다 낮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연령층에서 결혼 전후로 경력단절 비율이 높은 이유는 당시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7〉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 전후 경력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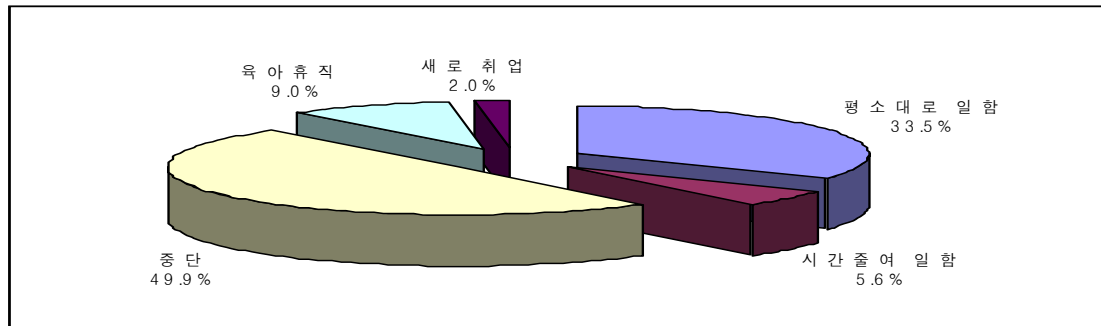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경력단절 경험		계 (명)
	있다	없다	
전체	61.2	38.8	100.0 (2,898)
20-24세	58.9	41.1	100.0 (48)
25-29세	52.9	47.1	100.0 (367)
30-34세	56.7	43.3	100.0 (858)
35-39세	62.6	37.4	100.0 (911)
40-44세	69.5	30.5	100.0 (71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2005.

첫째아 출산을 전후로 취업 기혼여성들의 근무형태 변경 실태를 살펴보면, 절반 수준인 49.9%가 취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기혼여성 중 평소대로 근무한 비율은 33.5%, 육아휴직을 낸 비율은 9.0%, 그리고 시간을 줄여 일을 한 비율은 5.6%로 총 48.1%가 이 기간 동안 동일 직장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기혼여성의 2.0%는 새로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그림 4]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이내 근무형태 변경 여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2005.

이와 같이 가사와 자녀양육이 취업기혼여성이 일을 계속하는데 가장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지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등을 통하여 남녀 모두 가사 및 자녀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수행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교과과정 속에서 기본적인 가사실습의 기회제공과 더불어 자녀의 중요성과 적절한 육아방법에 대한 교육내용의 강화를 요구한다. 저출산 시대에 아동이 갖는 사회적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인적자원 개발의 출발점이 되는 출생부터 아동양육을 맡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을 앞둔 남녀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실시, 기업 내에서 ‘부모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직원교육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 등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성보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게 되면서, 여성들은 출산 및 자녀양육이라는 노동과 경제적 생산을 위한 노동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고는 생식보건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초혼연령 상승으로 여성들이 늦은 나이에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되어 생식보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임신경험이 있는 유배우 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임신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소모원인에 따라 출산수준을 분석하였을 때 자연유산 경험횟수가 많을수록 평균출생아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에 따른 평균출생아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첫출산전 자연유산을 경험한 경우 또는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들은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보다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임신경험 유배우 여성의 임신소모 양상별 평균 현존 출생아수 비교

(단위: %)

구분	전체 유배우여성		출산중단 유배우여성	
	평균출생아수	(대상자수)	평균출생아수	(대상자수)
전체	2.01	(3,114)	2.11	(2,210)
첫째아 출산전 사산경험				
없음	2.01	(3,081)	2.11	(2,189)
있음	2.03	(33)	2.19	(21)
첫째아 출산전 자연유산경험				
없음	2.04	(2,741)	2.12	(1,979)
있음	1.77	(373)	2.01	(231)
첫째아 출산전 인공임신중절 경험				
없음	2.04	(2,724)	2.12	(1,964)
있음	1.79	(390)	1.96	(24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2005.

그러나 첫째아 출산 전에 인공임신중절이나 자연유산의 경험은 전체 가임기간 동안의 출생아수를 줄이고 있어, 초산전 임신소모 경험이 이후 생식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임신소모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육체적·정서적·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부담과 직결되어 사회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지원이라는 일방향성의 목적만이 아닌 가임기에 이르는 남녀의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접근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질적 인구의 생산을 기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및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첫 임신을 자연유산 및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성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할 필요가 있다.

Ⅲ. 인구구조 변동과 파급효과

1. 인구구조 변동 전망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 4,996만명으로 인구정점(peak)에 도달 후 인구감소가 예상된다. 2005년 현재 0.44%인 인구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어서 2020년 0.01%에 도달한 후 2030년에는 -0.28%, 2050년 -1.18%로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표 9).

〈표 9〉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연도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인구(만명)	4,701	4,829	4,922	4,996	4,933	4,235
인구성장률(%)	0.84	0.44	0.34	0.01	-0.28	-1.18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5.

인구구조 면에서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7.2%로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2005년 현재 9.1%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것으로 전망된다(표 10). 인구고령화 수준은 2050년에 약 40%에 육박하여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전망이다.

〈표 10〉 연령구조 변동 전망

(단위: %)

연도	2000	2005	2010	2018	2020	2026	2030	2050
0~14세	21.1	19.1	16.3	13.0	12.6	11.6	11.2	9.0
15~64세	71.7	71.8	72.8	72.6	71.7	67.5	64.7	53.7
65세 이상	7.2	9.1	10.9	14.3	15.7	20.8	24.1	37.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5.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그 수준뿐만 아니라 속도 면에서도 세계적으로 빠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노인비율 7%)에서 고령사회(노인비율 14%)로 이행하는데 18년이 소요되어,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노인비율 20%)로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8년에 불과하여, 프랑스 40년, 이태리 20년, 미국 16년 등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표 11). 이와 같은 최고속도의 고령화와 이에 대비한 제도·의식의 미비로, 고령화의 충격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클 전망이다.

〈표 1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국가	특정 노인비율 도달연도			소요기간(년)	
	7%	14%	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5	18	7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이태리	1927	1988	2008	61	2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2. 인구구조 변동의 파급효과

가. 사회적 파급효과

노인층 중 일부 또는 전부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비중이 대부분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적 및 상대적 증가 추이에 따라 사회전체에서 빈곤층이 확대될 전망이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는 32.5%에 불과하다(표 12).

〈표 12〉 65세 이상 노인의 생계수단, 2000

(단위: %)

구분	본인 또는 배우자 전액부담	일부 지원받아 생활	전부 지원받아 생활	전체
전체	32.5	45.4	22.0	100.0
여자	23.0	50.6	26.4	100.0
남자	48.0	37.1	14.8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사회적으로도 증가하는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사회보장비 등 부담 급증에 따른 세대간 갈등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노인부양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4.6명, 2030년 2.8명, 2050년 1.4명으로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표 13).

〈표 13〉 노인부양비 추이 및 전망

구분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노인인구비율(%)	7.2	9.1	10.9	15.7	24.1	37.3
노인부양비(%)	10.1	12.6	14.9	21.8	37.3	69.4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12.4	8.2	6.7	4.6	2.8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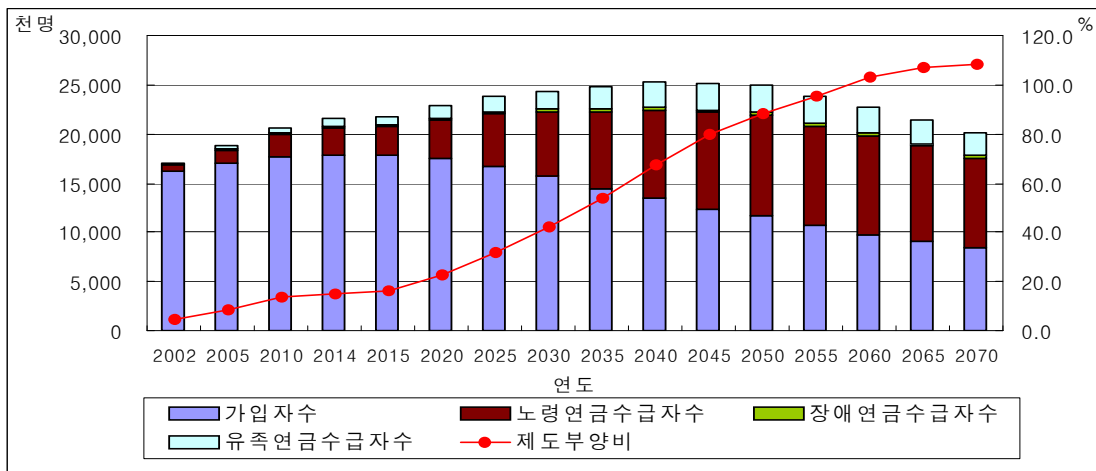
주: 1) 노인부양비율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2)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또한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연금가입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연금지출액이 연금수입액을 초과하여 연금고갈이 우려 된다. 연금가입자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령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여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단기적자는 2030년대 초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 연금수급자수는 2060년경에 가입자 수를 초과하여 제도부양비 비율이 100을 넘을 전망이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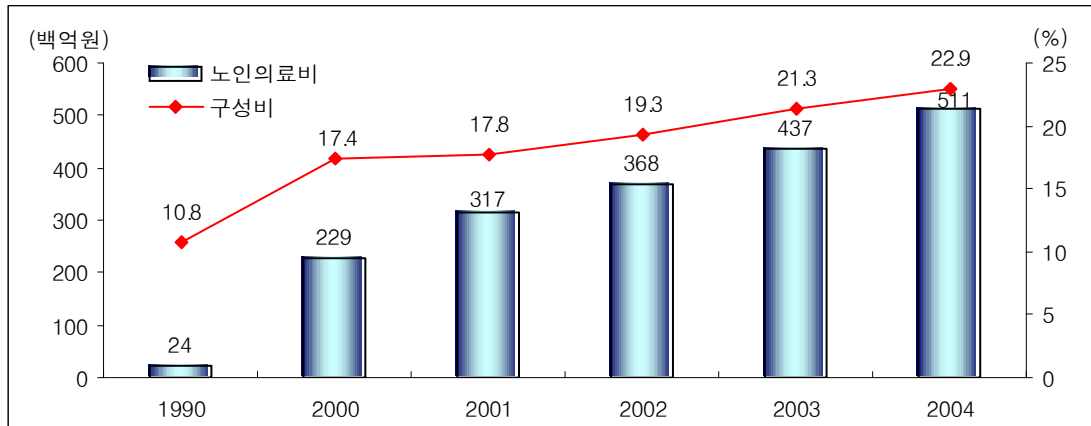
〔그림 5〕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수 전망



자료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2003.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타 연령층에 비해 의료수요가 큰 노인인구(특히, 75세 이상)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04년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5조 1,100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16.9% 증가하여 전체 의료비의 증가율 8.9%를 크게 상회하였다(그림 6).

[그림 6] 노인의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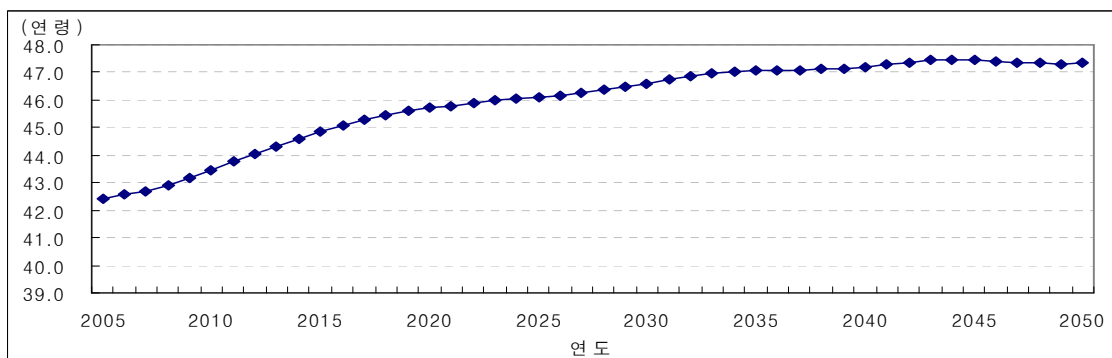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2006.

나. 경제적 파급효과

노동공급 추이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65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즉, 출생아수 감소는 20여년 후 신규로 노동력에 진입하는 인구의 감소를 유발하여 전체적인 노동력 규모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05년 42.4세에서 2015년 44.8세, 2020년 45.7세, 2030년 46.6세, 2050년 47.6세로 증가(통계청 특별추계: TFR 1.30 점근 가정)하고,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05년 38세에서 2020년 41.8세, 2030년 43.1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7).

[그림 7]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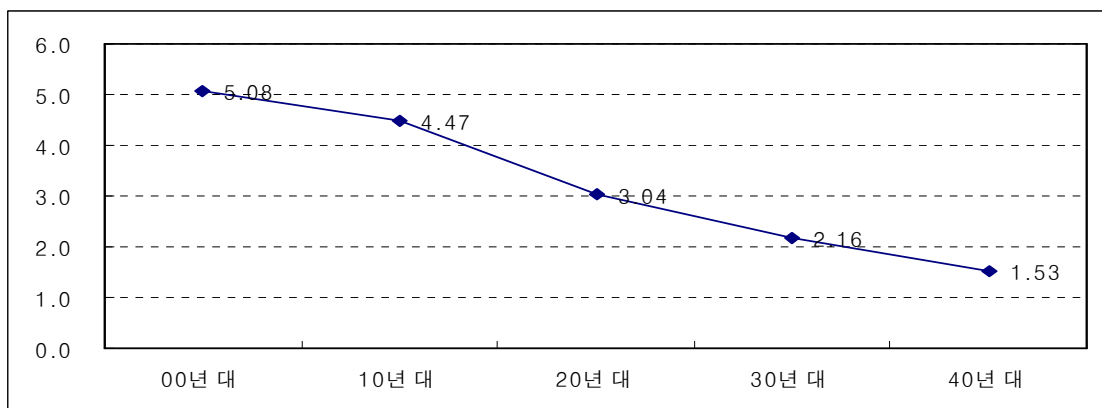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2006.

또한 정부재정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부담이 대폭증가하고, 재정적자로 재정안정성을 위협받게 되고, 반면 사회보장재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적자보전을 위해 후세대는 소득세외에 소득의 30-40%를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납부해야하게 될 것이다.

국민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는 2030년대 초에 적자로 반전되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2040년대 후반에는 매년 적자규모가 GDP의 10%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상과 같이 인구성장의 감소로 인한 파급효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고령화, 생산성 저하, 저축·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하여 경제 활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어,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5.08%에서 2020년대 3.04%, 2040년대 1.5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8).

[그림 8] 잠재성장률 전망(합계출산율 1.08 유지시, TFP 증가율 1.5% 가정)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2006.

IV. 교육의 기본방향

자녀와 가족에 대한 가치의 다양성을 복원하고, 성평등적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 자체와 그 파급효과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적 정책대안 못지않게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구성장의 파급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 또는 노동력의 감소,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 이에 따른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 진단에서 나타난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생식 보건수준의 저하 등을 감안한 향후 교육방향은 다음과 제시될 수 있다.

1. 저출산 원인관련 교육의 기본방향

가.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제고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을 통하여 가치관 변화와 사회환경 변화간의 부조화를 치유하기 위하여 결혼관이나 자녀관 등 바람직한 가족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학령기에 형성된 가치관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향후 학령인구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가족을 형성할 때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 자녀, 가족, 양성평등 등에 관한 가치관과 실상에 대한 내용을 초·중등학교 관련교과와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 등을 통해 교육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교육의 교과내용은 우선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교과내용은 가족관 및 양성평등관이 아동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적합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며, 모든 계층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저출산현상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인구교육의 내용이 적절하고, 양적으로 충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이 육아체험 등 실생활의 현장학습을 통해 결혼 및 육아의 가치와 즐거움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양성평등적 역할관 정립

여성의 자아성취욕구와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질 수 있는 사회제도가 요구된다. 여성의 역할이 단순히 자녀출산과 양육을 넘어서 사회개발의 일원으로서 남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학교 및 사회교육과 홍보를 통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 관행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가족 내에서 양성평등적 역할분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적 가치관 함양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가부장적 성분업적 역할규범을 탈피하여 가정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사, 자녀양육에의 공동참여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임신·출산·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교육

학령인구들을 대상으로 생식보건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성교육, 임신·출산 등 생식보건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인구의 질적 차원에서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에 적합하도록 성, 생식보건등과 관련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교육은 임신, 출산, 인공임신중절, 불임 등 생리적·의료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관련문제점들과 그 영향을 정확하고 충분히 전달하여 인식제고와 가치판단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식보건 문제점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적절히 대처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2. 고령사회 대응 교육의 기본방향

가. 연령통합적 사고의 고취

우리사회는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단계인 청소년기와, 노동의 시기인 청년기, 은퇴 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로 구분되어 모든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연령분리적인 사회이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사회가 사회·문화·경제적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연령통합적인 사회구성원리를 가진 사회로 변화가 필수불가결하다. ‘생물학적인 연령’에 기초한 경직된 사회문화는 고령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화된 개인의 욕구와 각 사회구성원이 갖고 있는 잠재력의 발현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연령통합적 사회문화는 첫째, 생애에 걸쳐 개인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연령장벽이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이러한 ‘유연한 연령기준’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연령에 의하여 특정 사회적 역할로의 진입과 퇴장, 수행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유연한 삶을 의미한다. 즉 교육, 일, 가족시간,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생애동안 조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령장벽의 유연화는 모든 연령층에게 선택의 기회와 자유를 증대시키며 기술, 교역, 건강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지구적 변화에 대한 구조적인 적응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는 큰 강점을 갖고 있다.

둘째로 연령통합적 사회문화는 상이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편, 다양한 연령층이 상호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연령, 코호트 등이 다른 사람들을 함께 모은다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연령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65세 이상으로 생존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의 생물학적 기능이나 축적된 경험,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시대의 경험이나 문화 또한 다양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사회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은 사회통합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그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하겠다. 다른 연령층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회성원의 폭넓은 참여가 촉진되고, 책임감을 공유할 수 있으며, 과거의 유산을 보존할 수 있다. 또한 협의의 지식 및 기술의 전달뿐만 아니라 가치, 태도, 역할수행 행동 등과 같은 광의의 사회화와 같은 현상이 상호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하여 가능해질 것이다.

나. 긍정적 노인상 제고

이러한 연령통합적 사회문화를 가진 사회로 원만히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화가,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 자신들도 사회에서 주입한 부정적 자아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청장년층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사회의 청년층은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조부모와 동거경험이 없을수록 노인편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과의 질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과서의 내용에서 연령차별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긍정적 노인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개편하며, 학교 프로그램에 세대간 교류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긍정적인 노인의 삶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노인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장 내에서 고령노동자가 갖고 있는 경

론과 식견을 인정하는 문화조성,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욕구와 어르신이 갖고 있는 경륜과 식견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노력들이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다. 평생교육체계의 수립

연령통합적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사회적으로 의미있고 개인적으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활동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평생교육체계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는 노인에게 있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며, 노인이 교육, 노동, 여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사회에서 생산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영위를 가능케 해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편, 사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계의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기회 균등의 측면에서도 평생교육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단지 연령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인적자원의 지속적 개발로부터 배제되지 않게 될 것이다.

V. 결론

오늘날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인식하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가족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여 올바른 가족관이 함양되고, 결혼·출산에 대한 희망이 증가하는 등 가치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제도적 개선과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에너지교육, 성교육 등이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 학습내용들로 ‘범교과 학습내용’으로 설정되어 재량활동 및 관련되는 교과, 그리고 특별활동 등의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경우도 교육의 전체 목적과의 합목적성 여부를 탐색해야 하고, 이러한 목적성 측면에서 정당성이 확보된 경우,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바람직한 가족가치관 형성, 성 및 생식보건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내용을 강화하고 교육시간을 증

가시켜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교과내용을 개편하여 가족관 및 인구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인구 및 생식보건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인구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내용을 단일 과목화하여 정규과목으로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과목 담당교사를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교교육 중심의 교육과 홍보 외에도 지역사회, 기업, NGO 등에서 행하는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에도 인구구조의 변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정보제공과, 저출산·고령사회에 적합한 가치관과 정책방향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단체들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문가 연수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대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각종 교육 대상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저출산·고령사회에 관한 교육 및 홍보자료가 개발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